

연말 '바른미래당발' 정계개편 오나

유승민 "12월 정기국회 종료 후 신당 창당" 패스트트랙 법안 한국당과 공조 움직임도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오는 12월 탈당 후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올 연말과 내년 초가 정계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승민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는 12월 정기국회까지는 마무리하고 그 이후 저희 결심을 행동에 옮기는 일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퇴진과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신당 창당 시점을 '12월 이후'로 못박은 것이다.

유 의원은 신당 창당과정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한국당 인사들과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한국당의 통합을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는 덮어두되, 공정·정의·평등·복지의 가치에 대해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유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은 "날치기 통과"라고 반대했고,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권력의 도구가 된다"고 반대하며, 한국당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분당과 정계개편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다. 유 의원

의 탈당과 '창당동지'였던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변혁' 합류 여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범보수연합 출범 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안 전 대표가 지난 9월 말 돌연 미국행을 선택하면서 유 의원의 신당 창당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유 의원은 안 전 대표와 연락이 아직 안 되는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더 새로운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비례대표가 대다수인 안철수계 의원들의 출당 여부도 주요 변수다. '변혁'은 유승민계(바른정당 출신) 의원 8명과 안철수계 의원 7명 등 의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철수계는 비례대표 의원이 6명이다.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손학규 대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손 대표는 이날 유승민 의원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작심 비판을 했다. 손 대표는 "황교안 대표와 거래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는 분들은 하루빨리 갈 길을 가라"며 유승민 대표에게 탈당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유승민 대표는 호남 배제론자라 내가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통합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제3지대가 호남주의이고 호남 정치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손 대표는 호남계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만든 '대안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일단 일축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에 야 "환영" 여 "예의주시"

정치권은 21일 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권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 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여당은 예의주시하며 말을 아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법원이 또 정권 눈치보며 영장을 기각하지 않길 바란다. 사법부의 정발 치욕적인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조국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영장 심문도 포기한, 조국 동생에 대한 이례적 영장 기각 같은 '불신의 판단'을 또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사법부는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여론의 흐름에 편승해선 안 된다"고 논평했고,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당 차원에서 따로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회의원 자녀 조사 특별법안 제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여의도 국회의안과에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서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스

"경제활성화 위한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문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

국회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5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슈퍼 예산'에 대한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 정부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은 취임 후 네번째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개편, 미래 대비를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또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 조국 사태 이후 민심을 수습하는 부분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시정연설이 나 만큼 예산 언급이 있을 것이고, 공정에 대한 말씀도 있을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5~6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

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예정위 간사는 11월 29일 예정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운 선심성 예산', '통계 왜곡용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며 대쪽 삭감을 예고해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 다.

서울=강택균 선임기자

국감 브리핑

호남 SOC예산 파수꾼 역할 '특독'

윤영일 의원, 예산 확보 주력

'대안신당'의 윤영일(해남·완도·진도·사진) 의원은 4년 연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활동하면서 호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낙후된 호남을 살리기 위해선 기반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올해 국감의 키워드 역시 호남 SOC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의 적극적 예산 지원을 따내는데 맞춰졌다. 감사원 출신 1호 국회의원답게 꼼꼼한 사전 자료 준비로, 핵심을 찌르는 정책 국감을 보여줬다.

윤 의원은 국토부 국감에서 국토균형발전에 따른 호남 SOC 확충을 촉구했다. 그동안 SOC 종합계획에 소외됐던 호남지역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요구했다. 서남해안관광도로 구축을 위한 약산-금일 간 연도교 건설과 완도 구도-소안 간 연도교 건설, 진도군해안일주도로 건설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진도 포산-서망 간 국도 4차선 확장, 옥천-도암 간 국도 4차선 확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윤 의원은 "호남발전, 농어민, 어르신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며 "예산 국회에서도 호남 SOC 확충, 농어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5·18 미국측 기록물 조속 이전 촉구

박주선 의원 "외교부 노력 필요"

바른미래당 박주선(광주 동남·사진) 의원은 2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의 문서 보존 기한이 지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들을 조속히 이전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5·18 기록물이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후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미국측이 실제적 진실 규명과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기록물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노력을 다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과정에서 미국의 조력 제공은 인권·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의 성공적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광수 남구의원 "납구청사 공익감사 청구는 잘못"

광주 남구청사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남구의회 김광수(가 선거구·사진) 의원은 제262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상황 문제를 위탁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는 대신 282억원의 분할상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11년 자금을 조달해 남구 옛 화니백화점을 남구청사로 리모델링하고, 위탁기간인 22년 동안 청사를 임대·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하는 내용의 개발위탁계약을 맺었다. 공실률 증가 등으로 비용 회수에 위험부담이 발생할 경우 최장 5년의 위탁기간 연장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인데, 지난해 6월 캠코가 남구에 공문을 보내 위탁개발비 분할상환을 요구했고, 남구는 명확한 행정처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광주=박지혜 기자

10CM x SORAN
십 센 치 그리고 소 란 콘서트
2019. 10. 25 FRI 8PM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주최 공연마루 주관 향라이프